

# 21세기 한국의 진로와 통일한국의 미래상

## “통일의 성취와 <통일한국>의 관리”

李 相 禹\*

### 1.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

한민족의 미래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민족통일을 생각해야 한다. 한민족사회는 민족사회성원 개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는 기본단위이다. 민족사회는 사회성원 모두가 자기의 연장으로 여기는 동류집단이며 의식차원에서 나의 연장으로로서의 <우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구성체이다. 민족사회를 모두가 자유롭고,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는 민주공동체로, 그리고 다함께 복지를 누리는 공존공영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에 남한에 살고 있는 민족사회성원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2천만 동포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동포애는 민족통일을 정감적 차원에서 민족사회발전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한국민은 무엇보다도 번영하는 민족사회건설에 북한동포도 동참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민족통일을 민족사회의 미래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족통일은 또한 민족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펴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은 민족사회성원 개개인에게 가족분단의 고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를 경계하는 군비의 유지, 외교적 소모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 등은 민족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북한 사회 모두에 안겨 주고 있다.

민족통일은 한민족이 굴종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민족자존의 시대로 들어서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되고 있

\* 西江大 정치학 교수

다.

민족통일은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를 하나로 다시 통합하는 일이다. 문화 공동체로서의 한민족 사회의 동질성 및 <우리의식>을 회복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남북한 사회를 하나의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로 다시 묶는 일이다.

한민족 사회는 1945년 해방의 과정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점령에 의하여 영토적으로 분단되었으며, 1948년 이념을 달리하는 두개의 정부가 남북한에 각각 세워짐으로서 정치적으로 분단되었고, 다시 1950년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전쟁발발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민족 분단을 겪게 되었다. 민족통일의 과제는 이러한 분단을 모두 극복하는 일이다. 남북한 주민들간에 같은 민족성원으로서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키며, 남북한을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묶고, 경제·사회체제를 통합하고, 영토적 분단을 극복하여 남북한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회복하는 일이 민족통일과제의 내용이다.

민족통일의 과제는 그 내용이 명백하나 통일한국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들은 다양하며 또한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분단초기에는 통일이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로 인식되었으므로 통일상태에 대한 새삼스러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반세기에 걸쳐 남북한 사회가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발전을 해 온 결과로 이제는 통일된 한국이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새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통일의 과제에는 어떤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해내는 과제도 추가되고 있다. 민족통일의 과제는 단순한 분단이전의 과거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설계의 하나로, 즉 창조적 과제로 되었다.

## 2. 통일정책목표

통일은 자유·민주·복지가 보장되는 발전된 한민족사회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자유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지 않은 통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하는 통일이라면 그것은 민족 사회발전 목표와 조건으로서의 통일, 즉 목표와 조건을 뒤바꾸는 일이 된다. 어떤 통일한국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가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평화가 공존에 대한 자발적 합의라고 한다면 통일은 곧 한민족 사회성원이 모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기는 통일>이 아닌 <함께사는 통일>을 통일의 길로 삼는다면 통일이란 정치통합까지 포함한 완전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날까지의 과정을 통일의 목표에 맞도록 관리하는 과정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 목표로서 다음의 네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하나의 민족공동체의 형성이어야 한다. 통일은 민족사회의 단일성 회복을 말한다. 그리고 형식상이 아니라 실제로 민족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 사회가 완전히 분단된 현실에서 명목상의 통일정부를 세웠다고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통일의 목표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두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체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남북한 주민이 똑 같은 구성원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의 목표를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형성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두체제를 포용한 단일국가란 있을 수 없다. 통일은 하나의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가진 1국가를 형성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물론 과도적 조치로 공존단계에서 각각 다른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2개 정부를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를 통일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통일목표로 삼을 수도 없다. 통일은 1민족 1국가 1체제의 형태로 추구되어야 한다.

둘째는 민주공동체로서의 정치질서의 확립이다. 통일한국의 정치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치질서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정치질서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원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의사를 모두 존중하는 만민평등의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가 통일의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보다 상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족공존공영의 경제질서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복지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이 어

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질서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통일은 민족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더 큰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통합된 민족공동체의 경제체제의 기본 형태는 <보완된 시장경제체제>로 설정해야 한다.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 및 개방경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을 강화한 형태가 통합된 민족공동체의 경제체제·사회체제의 모습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사회가 하나로 수렴되어 형성될 경제공동체는 이미 한계를 보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이 입증된 시장경제여야 한다. 민족공동체건설의 궁극목표는 자유 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며, 중간목표로서 평화공존 및 민족경제·사회의 동질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 우호선린의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은 평화국가여야 하며 이웃나라와 우호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여야 한다. 통일한국은 이기적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다른 민족을 억압 착취하는 독선적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웃과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민족과 더불어 서로가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는 평화공존을 통일한국의 외교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사해동포의 우호선린정신은 수천년간 지너온 우리민족의 기본적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 3. 통일정책 추진방향

국민적 합의로 세워놓은 통일목표에 부합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남북한 사회의 통합과정도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통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룬 후의 사회, 즉 통일한국의 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구상도 미리 해두어야 한다.

#### (1) 통일을 위한 내적준비 : 분단관리

통일에 관한 원칙 및 방법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한국 헌법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도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통일정책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단계별 통일정책 추진의 모든 노력은 물론, 통일한국의 모습의 설정, 통일에 이르는 과정 등도 국민적 합의 창출에 기초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정치질서는 민주공동체의 확립이다. 시민민주주의 정착을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유와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고, 민주참여의 기회를 갖는 민주공동체로 만든다는 국가발전목표는 통일한국의 기본정치구상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통일은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 놓은 민주공동체를 남북한 사회전체를 포용하는 하나의 민주공동체로 확장하는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통일의 주체인 모든 국민을 통일의 주역으로 만듦으로서 통일추진역량을 증대시키는 일이 될 뿐아니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동포의 통일열망을 환기시키는 통일촉진책이 된다. 역으로 남한에서 민주주의 정착에 실패하게 되면 남한은 통일을 주도하는 지위를 잃게 되며 통일의 명분도 잃게 된다.

시민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민주공동체의 확립은 국가발전 목표입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기초적 준비과업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통일한국의 경제운동을 위한 기초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1민족 1국가 1체제의 단일 민족공동체로 된다면 남북한의 경제도 단일체제로 통합되게 된다. 반세기동안 다른 경제체제 밑에서 차등발전을 지속해온 남북한간의 경제 격차는 엄청나다. 사회간접시설, 산업구조, 인적자본(human capital), 경제운영체제 등의 유형 및 무형자산에서도 남북한 간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국민 총생산 창출 능력에서도,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엄청난 격차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지역에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은 순탄하게 조기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후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할 투자능력을 미리 배양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경제체제를 남한의 경제체제와 상응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해두어야 한다. 준비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대내적인 노력과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반도정세에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의 우

호적 협조없이 통일을 순탄하게 달성할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축복을 받는 통일이 될 수 있게 치러면 사전에 이들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정, 유지해야 한다.

주변국의 국력과 한국의 국력간의 격차는 크며, 그 간격은 쉽게 좁힐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변국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확보한다는 것이 통일의 선제조건이 된다. 즉 통일한국에 대하여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가 가질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해소하고, 통일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뚜렷하게 심음으로써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한반도 분단상태가 통일로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 (2) 남북협조관계 구축 노력의 전개 : 통일과정의 관리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후유증이 커진다. 통일과정은 평화롭고, 혼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과정은 분단현실의 인정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현재 남북한 사회는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각 독립된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남북한 현존상태를 상호인정하며 공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된다. 남북한은 1992년 2월에 공존합의를 <기본합의서>로 문서화했으나 북한은 아직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남북한이 단일 정치체제속에 통합되는 정치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상호신뢰의 구축작업이다. 오랜 대결과 전쟁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불신은 깊어져 왔으며 현재의 남북한관계는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불신정도가 심한 상태에 놓여 있다. 통일과정은 이 불신의 해소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불신이 지속되면 통일의 노력을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

신뢰는 조그마한 약속의 이행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조성된다. 남북한의 의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행위를 쌓아가야 하며 천명한 약속은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불신의 벽을 깨야 한다. 남북한간에 신뢰를 쌓기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상대에 대한 안전보장이다. 즉,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시

키는 상호신뢰구축조치(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는 통일노력의 첫 번째 과제이다.

이러한 구초의 첫 단계로 우선 전쟁이 포기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로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1992년 2월에 발표시킨 합의서와 군사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각종 군비통제조치는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결정적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둘째, 공존합의를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의 대결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하고, 이질화된 민족사회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평화적, 민주적 통일방침이다. 통일논의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공존의 제도화이다. 서로가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한국의 장래를 논의할 때 통일된 국가형태가 합리적으로 규정되며 남북한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계획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후의 단일화된 국가사회경영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사회통합이 평화적,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진척되어야 한다.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민족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남북한이 일체감을 이루어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성숙으로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곧 통일과업이다. 따라서 목표를 염두에 둔 과정을 선택해야 한다.

남북한은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의 체제전복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공존의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 합의를 실천할 제도를 아직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공존합의는 제도화를 통하여 객관화, 안정화된다. 공존관계가 안정되어야 이를 기초로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 및 체제 통합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

공존의 제도화는 상호주권의 존중,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평화 협정 및 앞으로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불가침조약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불가침의 실증적 실천이다.

세째,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사회, 문화, 경제체제의 상응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분단이후 반세기간 상반된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체제간의 대립이 과거 어느 분단국가보다도 크므로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전에 남북한이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남북한 공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민주적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간에 통행, 통신, 통상의 3통(三通)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면 남북한간의 사회체제, 문화, 경제체제에서의 상응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와 함께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간 단일화폐의 통용과 단일경제관계법의 적용으로 양 지역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여 경제적 단일국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이 더 진행되어 남북한 주민이 거주지 제한없이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면 경제통합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학습과정과 스스로의 체제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간에 체제상극성이 줄어들게 되며 동시에 생활환경의 동질화, 문화의 동질화, 의식의 동질화가 진행되면서 남북주민간에는 <우리의식>, 하나의 <민족의식>이 자리잡게 되어 민족통일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 교류협력을 통한 체제상응성 제고노력은 평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해서는 불가결하다.

네째, 단일정치 체제의 구축이다. 남북한간에 경계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형식상의 경계로 될 정도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면 정치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이념의 통합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하나의 체제가 상이한, 그리고 상극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적 단계로 주권국가 연합으로서의 국가연합 단계를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협력영역을 점차 증대하게 되면 정치통합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연합은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이지 결코 통일된 하나의 정치상태일 수는 없다.

통일의 완성은 단일정치체제로의 통합은 이루어진다.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단일의 정치이념, 단일의 헌법, 단일의 법체계, 단일의 국민을 가지는 단일국가여야

한다.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에 북한의 현존체제를 순응시켜 나가는 작업이 정치통합과정에서의 핵심과제가 된다.

### (3)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준비 : 통일한국의 관리

정치통합은 한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의미한다. 경제적·정치적 통합 및 사회·문화 통합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완성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며 한민족공동체의 완성이다. 정치통합은 단일 정치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순탄하게 그리고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압적인 정치통합은 무리와 회생을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차적 목표는 영토통일, 정치통일에 두지 말아야 하며 한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경제공동체 구축에 두어야 하며, 남북한 국민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의 단일성만 유지된다면 정치통합은 언제라도 가능한 반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통합을 추진하면 민족 자체의 단일성마저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점진론적 방안이다. 즉 일방체제로의 통일이나 양측의 타협에 의한 제3의 체제로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간단계로서 비정치적 영역에서 실질상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는 생활공동체를 우선 구성하여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킨 후 정치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체제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형상의 통일은 완성되나, 오랜 분단기간동안 진행된 이질화로 벌어진 남북한 주민의 의식차이를 극복하는 문제 등은 계속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국가 및 사회조직체의 통합조정, 생활양식의 동질화, 대외관계의 재조정 등도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모든 과제가 성취되어야 민족공동체는 단일성을 완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한국의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민족의식, 문화통합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민족이란 문화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동류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리고 문화란 삶의 존재양식을 말한다.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공통의 가치정향, 공통의 사

물인식 방법 등을 터득하게 되며 이러한 공동의 정신적 요소들의 집합이 문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 동포들의 민족의식은 전통문화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후의 절연된 상태에서의 삶의 남북한 주민들의 전통문화 인식에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질화된 요소들의 극복이 이루어져야 민족동질성이 회복된다. 남북통일을 이룬 후 완전한 단일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족의식, 문화전통의 통합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 문화통합의 과제는 문학과 예술의 이질성 극복,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및 생활문화의 동질성 회복이다. 남북한의 문학, 예술의 이질성은 매우 크다. 남한의 문학과 예술이 지니고 있는 창작의 자유, 주제의 다양성, 문학성과 예술성 지향, 다양한 양식의 혼재 등은 북한의 경우 용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 극복의 방향은 결국 문학과 예술 창작의 자유 및 다양화의 추구일 것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면 인간의 욕구도 다양해지며, 점진적이거나 북한사회가 개방되면서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결과 교조주의적 문학과 예술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 단일화 노력이 없이는 단일문화 전통을 재구축하기 어려우리라 본다.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두 사회가 진정한 하나의 동질사회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제도의 조정과 확충이 필요하다. 자유를 앞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남한사회에서는 보다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반면에 형식적으로는 철저한 사회보장 제도아래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북한사회에는 그 제도의 내실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두 사회가 만나는 합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남북한은 하나의 민주복지국가로 통합되는 사회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남북한 사회동질성 회복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북한사회의 성격은 남한사회와는 다르다. 북한이 집단주의사회라면 남한은 개인주의사회이며 북한이 조직사회, 계획사회라면 남한은 비조직사회, 자유방임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양극단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양극의 사회가 갑자기 통합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갈등과

혼란은 극심할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이질성 극복 또는 동질화는 한민족공동체 완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사회단위로 작동하려면, 북한사회가 전체주의 사회, 획일화된 사회, 일당지배의 사회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이익집단의 힘의 균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남북한 인구구조에서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1954년 이후의 출생자 비율이 남한이 69%, 북한이 74%이고 이 구성비는 2010년이면 남북한이 각각 80%, 9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세대는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실용주의를 집단주의에 앞세우며 획일적 행동양식보다는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양쪽의 세대교체를 통한 동질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한 공존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동질성 형성을 순조롭게 할 것이다.

세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를 위한 사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도 주변국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일한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변국과의 우호선린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한국의 안보환경 및 외교과제는 통일이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은 근원이 북한으로부터 러·중·일로 다변화하고 동북아 4강 균형체제가 군사적으로 통일한국을 포함하여 동북아5강 세력균형체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통일한국의 안보정책의 목표는 자체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위력의 유지와 주변 4강과의 쌍무적 협력체제를 기초로 하는 동맹체제 구축, 그리고 다자간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여 국제질서에 의해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국제질서차원의 노력 등 3차원적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두어야 하며 그 사상적 기초는 <평화공존>이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외교는 3가지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그 첫째는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외교이며, 둘째는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외교이며 세째는 통일이후를 준비하는 외교이다.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이다. 통일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의 불안감이나 의구심을 해소하

고 통일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형성시킴으로써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한반도분단상태가 통일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통일과정을 순탄하게 하기 위한 외교로서는 한국통일노력에 대한 우방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획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유지관리를 위한 외교에서는 폭넓은 우호선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그 핵심이 되리라 본다.

위의 모든 사전 준비는 남북한 통일은 평화롭고 순탄하게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예상외의 사태진전으로 통일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비상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이 커질 것이다. 정상적인 통일정책 이외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계획도 아울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